

2025년도 인도 연방 예산안, ‘선진 인도’ 비전의 초석을 놓다

임정성 연구위원, 철강연구센터(jsimm@posri.re.kr)

목차

1. 들어가며
2. ‘선진 인도’ 비전과 4대 성장엔진
3. '25년도 인도 연방 예산안의 중점 부문
4. 인도 산업계의 반응
5.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'25년도 연방 예산안은 세 번째 5년 임기를 맡고 있는 인도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정식 예산안으로서 미래 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
 - 금년 예산안 주제는 '모두를 위한 발전(Sabka Vikas)'이며, 2047년 선진 인도(Viksit Bharat) 비전의 모습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
- 중국의 '샤오강 사회'와 유사한 '선진 인도' 비전의 6대 원칙은 빈곤 철폐, 양질의 교육, 의료 접근성, 숙련 노동, 여성 경제 참여, 농업 혁신으로 구성
 -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성장 엔진은 농업, 중소기업, 투자, 수출이며, 성장 엔진을 가속화하는 연료로서 '개혁(reform)' 추진을 강조
- '25년도 예산안은 중산층의 소비력 강화, 인프라 투자 확대,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
 - 5년 만에 개편된 소득세 체계로 인해 연간 총소득이 127.5만 루피(약 2,180만 원) 소득자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
 - 수송과 에너지(재생에너지, 원자력 포함)를 위시한 인프라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위해 사상 최대 금액인 11.2조 루피(약 191조 원)의 예산을 할당
 - '국가제조업미션' 하에서 미래 핵심 산업인 전기차, 클린테크,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조, 군수, 조선 산업의 육성 정책을 발표
- 금년 예산안에 대한 업계 반응은 정부의 장기 비전을 환영하고, 소득세 감세 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 회복과 경제 성장을 기대
 - 자동차 업계는 EV 생태계의 강화, 철강업계는 원자력 투자로 인한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 촉진, 전자업계는 '30년 5천억 달러 목표 실현을 기대
 - 반면, 반도체 업계는 '인도반도체미션 2.0' 정책의 세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정책 발표를 요구
- 인도 정부의 정책 키워드가 '자립 인도', '선진 인도'이므로, 우리 기업들은 자립화 정책 성공으로 '기회의 문'이 닫히기 전에 사업 입지 확보가 필요
 - 향후 인도 진출 시, 현지 우수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투자 방식도 고려해야 하며, 신설(그린필드) 투자만이 아닌 기업 인수합병(M&A) 및 증설(브라운필드) 투자의 유효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1. 들어가며

- 매년 2월 1일 재무장관이 '007 가방'을 들고 등장해 발표하는 연방 예산안(Union Budget)은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연례 이벤트로 정착
 - 시타라만(N. Sitharaman) 재무장관은 "국가는 단순한 땅이 아니다. 국가는 국민이다."라는 인도의 유명한 시 구절을 인용하며, '25-'26 회계연도¹(이하 '25년도) 예산안 연설을 시작
 - 금년 예산안 주제도 '모두를 위한 발전'과 '모든 지역의 균형 잡힌 성장 촉진'인데, 인도국민당(BJP)이 작년 총선에서 예상 밖의 부진을 보인 결과에 대한 성찰이 반영
 - 또한, 서민·청년·농민·여성을 정책 우선 계층으로 삼고, 중산층의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가처분 소득을 높임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
- '25년도 예산안은 작년 6월 세 번째 임기를 개시한 인도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정식 예산안²으로 미래 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
 - 작년 7월에 공개한 '2047년 선진 인도(Viksit Bharat)' 비전의 구체적인 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이번 예산안에 제시
 - 독립 100주년인 2047년 달성을 목표로 하는 '선진 인도'는 농업, 중소기업 (Micro, Small & Medium Enterprises, MSME), 투자, 수출 등 4대 성장 엔진을 가속화해 달성한다는 국가 장기 비전으로 제시
 - 이에, 글로벌 지정학 및 경제적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는 인도의 장기 비전이 내포하는 함의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

2. '선진 인도(Viksit Bharat)' 비전과 4대 성장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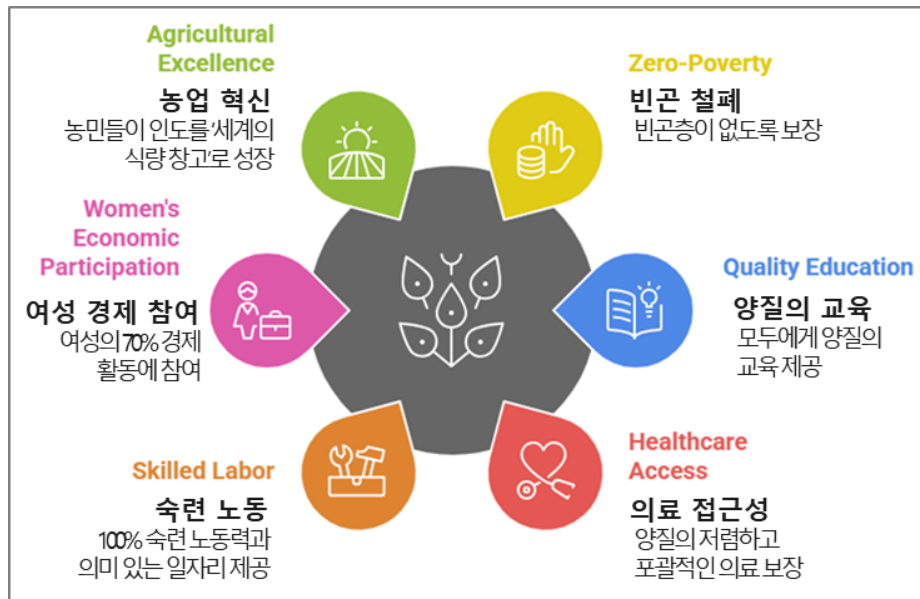
- 인도국민당은 3기 연속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가 비전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, 안정된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

¹ 인도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종료

² 인도에서는 총선이 있는 해에는 잠정예산안(Union Interim Budget)이 제출되고, 총선 후에 정식 예산안(Full Budget)이 발표

- 이번에 발표된 '선진 인도'의 6대 핵심 원칙은 빈곤 철폐, 양질의 교육, 의료 접근성, 숙련 노동, 여성 경제 참여, 농업 혁신 등이 해당
 - 특히, 국민의 약 65%가 거주하는 농촌과 농업 분야 문제, 경제활동 참여율이 25% 수준인 여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

【 '선진 인도(Viksit India@47)'의 핵심 원칙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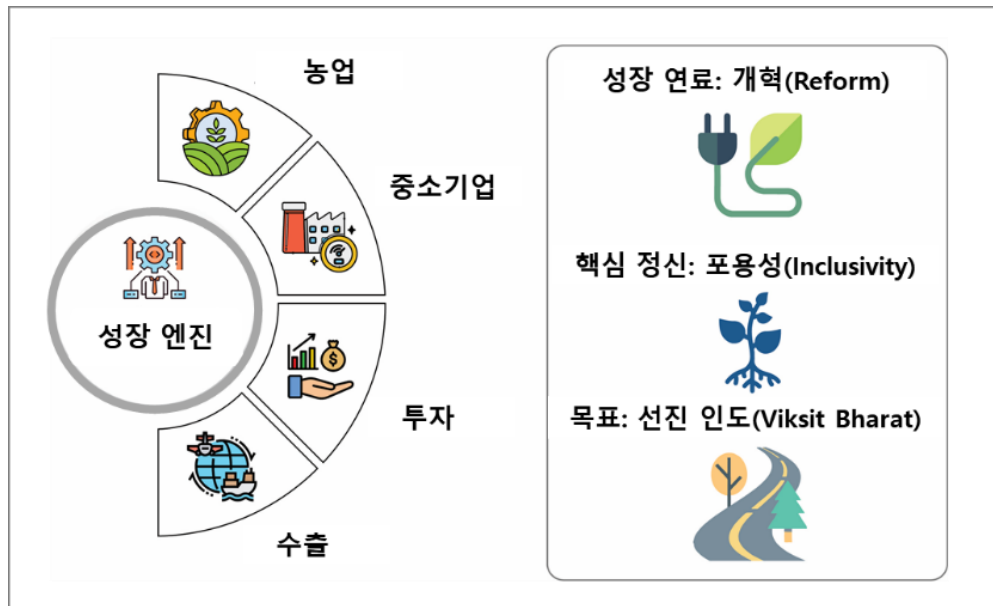
- '선진 인도' 비전은 과거 중국이 지향한 '샤오캉 사회(小康社会)' 비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비교가 됨
 - 샤오캉 사회는 덩샤오핑이 1979년에 개념을 제시한 이후, 중국 공산당의 핵심 국가발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, 빈곤을 해소하고 전면적 중산층 사회 구축을 목표로 추진
 - '21년,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“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실현했다”고 공식 선언한 바 있음
 - 중국이 공산당과 정부 주도로 '샤오캉 사회' 건설을 추진했다면, 인도는 민간 투자와 제도 개혁, 기술 혁신 중심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수립

□ 인도 정부는 '선진 인도'로 가기 위한 4개의 성장엔진을 제시

- 첫 번째 성장엔진으로 꼽은 '농업'은 인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인데,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은 15%로 감소했지만,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최대 유권자 집단이기 때문

- 이번에 발표한 '국물농업촉진계획'은 100개의 농촌지역 군(district)을 대상으로 시행되며, 약 1,700만 명의 농민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
- 주 정부와 협력해 출범하는 '농촌번영회복프로그램'은 농촌의 불완전 고용 문제 해소와 기술·투자·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가 목표

【 인도의 4 대 성장엔진과 '선진 인도' 목표 】



○ 두 번째 성장엔진은 인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'중소기업'으로, 제조업 생산의 36%, 수출의 45%를 기여³

- 과거 인도 정부가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뛰어넘고, 중화학 중심의 산업 정책을 펼친 여파로 최근 청년 실업률이 30~40%까지 증가
- 실업률 문제의 해결책으로 중소기업 부문 육성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, 이번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상향 조정
 - 중소기업의 투자한도는 2.5배(최대 12.5억 루피), 매출 한도도 2배 (최대 50억 루피)로 올려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⁴
 - 신용보증 한도도 5천만 루피에서 1억 루피로 확대하고, 우량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억 루피의 장기 대출 보증도 제공
-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한도를 2배로 확대(1억에서 2억 루피)하고, 펀드 규모도 기존의 1,000억 루피에 1,000억 루피를 추가, 대체투자 펀드를

³ 총 5,700만 개 중소기업 중 등록된 1,000만 개 중소기업 기준

⁴ 인도 루피당 원화 환율(KRW/INR)은 17.09원('25.3.24. 기준)

통해 9,100억 루피 이상의 투자 약정을 확보

○ 세 번째 성장엔진은 '투자'인데, 사람·경제·혁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유도

- '사람에 대한 투자'는 영양(nutrition) 지원, 디지털 접근성, 의료 및 기술 교육 확대, 과학·혁신 인재 양성, AI교육 특화센터 설립 등이 포함
 - 인도공과대학교(IIT)의 학생 수를 10년간 2배로 늘리고(6.5만→ 13.5만 명), 신규로 5곳의 IIT를 설립할 계획
- '경제에 대한 투자'는 수송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핵심 제조업 육성을 포함하며, 10조 루피 규모의 제2차 민영화 계획('25-'30)을 추진
- '혁신에 대한 투자'는 민간주도 R&D·혁신 이니셔티브에 2,000억 루피를 배정했으며, 딥테크 펀드로 차세대 스타트업 육성 기반을 조성할 예정

○ 마지막 성장엔진은 '수출'로, 중소기업에 포함한 제조업을 수출 촉진책을 통해 육성하고, 고용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

- 산업별·부처별로 목표를 설정한 '수출촉진미션'을 출범할 예정이며, 수출 신용 접근성 제고, 국경 간 팩토링(cross-border factoring) 지원⁵, 중소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지원
 - 무역 서류 통합, 금융 솔루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국제 무역용 디지털 공공 인프라 'BharatTradeNet(BTN)' 구축을 계획

□ 한편, 인도정부는 '4대 성장엔진'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료(fuel)로서 '개혁'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

○ 인도정부를 자문하는 최고경제고문(CEA)⁶은 '예산경제조사보고서'를 통해 '선진 인도'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라고 제언

- 이에, 인도정부는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했던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낡은 법제도를 개정할 방침으로, 조세, 전력 부문, 도시개발, 광산업, 금융산업, 규제 등 거의 전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할 예정

⁵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즉시 현금화해 주는 무역금융 기법으로, 수출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과 대금 회수 리스크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

⁶ Chief Economic Advisor로서 현재는 Dr. V. A. Nageswaran이 18대 ECA에 임명

3. '25년도 인도 연방 예산안의 중점 부문

□ 인도정부는 우선적으로 가계 소비심리 개선과 중산층의 소비력 강화로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,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

○ 5년 만에 소득세를 개편해, 연간 120만 루피(약 2,050만 원) 급여 소득자까지 실제 납부 세액이 0원이 되는 혜택을 적용

- 이로써 약 6,0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, 소득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낮춤으로써 상위 소득층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⁷가 발생
- 추가적인 75,000 루피의 기본 공제로 127.5만 루피(약 2,180만 원)의 소득자까지 실제 면세 범위에 해당

□ 두 번째로 수송과 에너지를 위시한 인프라 부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투자 집행을 중점적으로 추진

○ '예산경제조사보고서'에서도 최근의 지정학적 경제 분열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및 전략적 우위 상황을 고려하여, 향후 10년간 인도 정부의 성장 전략으로서 '대규모 인프라 투자'가 필수적이라고 제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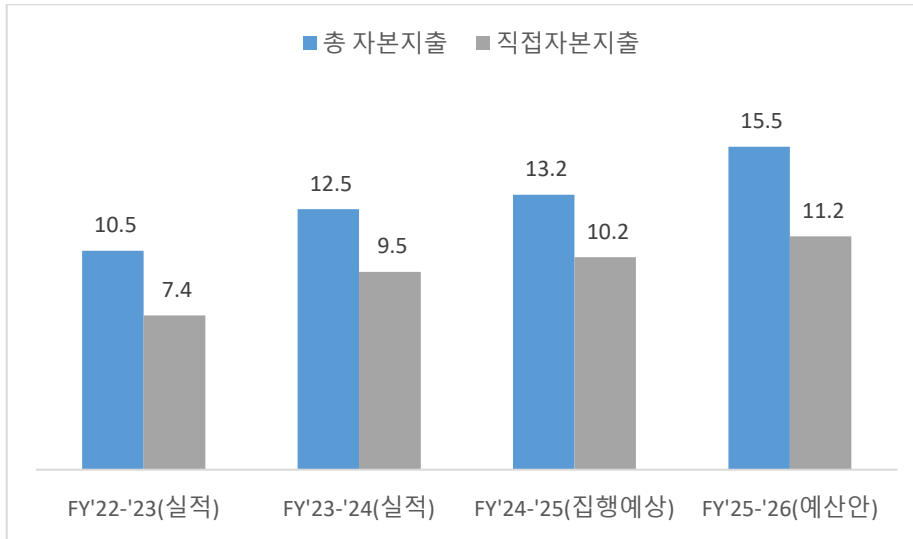
○ '25년도 자본지출액 예산은 15.5조 루피이며, 이 중 주로 수송·에너지·도시개발 등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는 직접자본지출액은 11.2조 루피로 책정

- 수송부문 예산은 연방 예산안 중에서 최대 비중인 10.8%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며, 이번에 1조 루피 규모의 도시도전기금(Urban Challenge Fund)을 조성해 도시 재개발 강화를 추진할 계획
- 에너지 부문 강화를 위한 전력 개혁 인센티브와 재생에너지 투자 강화, 원자력 정책을 발표하여, 주 정부의 배전망 개혁과 송전망 확충을 장려
 - 원전부문의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, '33년까지 최소 5개의 SRM(Small Modular Reactors)을 자체 개발하여 가동할 계획('47년까지 최소 100GW의 원자력 발전 능력이 목표)
-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인프라 사업은 부족한 정부 예산을 공공-

⁷ 종전에는 70만 루피까지 사실상 면세 받았던 것에 비해 대폭적인 상향 조정.

민간협력모델(PPP)로 보완할 방침이므로, 인프라 부처와 주 정부에 3개년 PPP 로드맵 수립을 의무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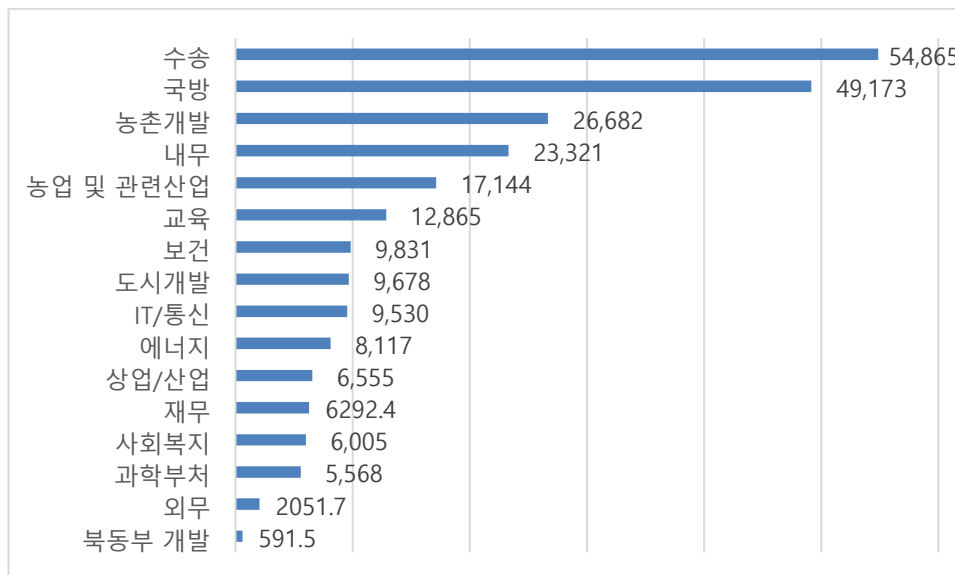
【 인도 연방예산의 자본지출 추이('23~'25) 】(조 루피)



주: 1. 총자본지출(Capital Expenditure) = 직접자본지출 + 자본자산 구축을 위한 보조금
2. 직접자본지출(Direct Capital Outlay)은 대부분 인프라 투자 지출로 구성

자료: 인도정부 재무부

【 FY'25-'26 인도 연방예산안의 부문별 지출계획 】(억 루피)



자료: 인도정부 재무부

□ 세 번째로 '국가제조업미션'과 생산연계인센티브(PLI) 정책 하에서 핵심 제조업 분야의 자립화(Make in India)를 중점적으로 추진

- '25년도 예산안에서 전기차(EV)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12종의 핵심 광물과 배터리 제조용 35종의 자본재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발표
 - 또한, 전기차 육성 정책(FAME)을 연장해 이륜차·상용차 중심의 EV 보급 인센티브를 지속하고, 민관협력을 통한 EV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추진
- '클린테크국가제조미션'을 출범하여 클린테크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, 제조 지원을 통해 국산화율 제고와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수립
 - 태양광셀, EV배터리, 모터·컨트롤러, 수전해 장치, 풍력터빈, 초고압 송전 장비, 대용량 그리드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인센티브 제공
- 전자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 관세 조정과 외국 기업 및 기술자의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
 - LCD/LED TV용 오픈셀 관세 인하(10%→5%)로 자동차용 전자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고,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 관세는 10%에서 20%로 인상
 - 반도체 부분도 예산 증액을 통해 반도체 FAB 프로젝트, ATMP(조립, 테스트, 제조, 패키징) 시설, 연구소 현대화 등을 지원할 계획
- 한편, 세계 1위 무기 수입국인 인도는 군수산업 자립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, '47년까지 세계 5대 조선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
 - 최근 무기 수입을 러시아 중심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으로 서방 비중을 높이면서, 기술이전과 자국 생산을 추진
 - 또한, 인도 정부는 2,500억 루피 규모의 '해운개발기금'을 통해 최대 20년간 관세 면제, 선박 건조 보조금 지급, 조선 클러스터 조성 및 기술·인프라·인력 통합 지원 등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

4. 인도 산업계의 반응

- 예산안에 대한 업계 반응은 정부의 장기 비전을 환영하고, 소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 회복과 경제 성장을 기대
- 인도자동차공업협회(SIAM)는 “배터리·모터·컨트롤러 분야 지원과 광물·자본재 관세 면제가 강력한 EV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발표

- Volvo Car India의 말호트라 대표는 “배터리 재활용, 충전 인프라 구축 등 EV 생태계 강화와 세금 면제는 EV 보급 확대를 유도할 것”이라고 언급
- 인도철강협회(ISA)는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자동차와 소비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, 철강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
 - JSW Group의 진달 회장은 “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11.2조 루피의 인프라 지출 규모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, 철강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”이라고 언급
 - AMNS India의 우먼 CEO도 “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국가 전체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할 것”이라고 논평
- 인도모바일전자업계(ICEA)의 모힌드루 대표는 “이번 예산은 '30년까지 전자산업 5천억 달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며, 인도 전자업계 생태계를 강화할 것”이라며 환영
 -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구조 합리화는 비용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가치 사슬과의 통합 촉진에 기여하고, 국산화 확대, 수출 증가,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
- 한편, 일부 업계는 이번 예산안의 인프라 지출과 생산연계인센티브 (PLI) 정책이 불충분하고, 반도체 정책의 경우 세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이 실망스럽다며 추가적인 정책 발표를 요구
- 인도전자반도체협회(IESA)의 찬다크 대표는 작년 9월에 발표된 ‘인도반도체미션 2.0’⁸에 대한 세부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지적

5.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

- 인도 정부의 중장기 정책 키워드는 ‘자립 인도(Aatmanirbhar Bharat), ‘선진 인도’로 요약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제조업 강화와 인프라 개선에 투자를 지속
- 또한, 투자환경 개혁을 내세워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하므로,

⁸ 인도반도체미션(ISM) 2.0은 원자재, 가스, 기판, 화학물질 등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, 1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

한국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자동차, 배터리, 반도체, 원자력, 조선, 철강 등에서 투자를 기대

- '예산경제조사보고서'는 인도의 '25년도 경제성장률을 6.3~6.8%로 예상하고 있어,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유일하게 빛나는 국가로 평가

- 재정적자 비중(GDP 대비)을 '24년도 4.8%에서 '25년도 4.4%로 감축하는 목표로 인해 인프라 투자 지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못했으나, 민관협력 사업(PPP)이나 민간 투자 활성화 방향을 제시

□ 인도의 제조 자립화 정책이 성공해 '기회의 문'이 닫히기 전에, 우리나라 기업들은 서둘러 사업 입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

- 인도시장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1,400개('22년 기준)인데 비해 한국기업들은 306개사에 불과('24년 현재)한 상태

- 우리 기업들은 '90년대부터 조기 진출했으나, 열악한 인프라와 제조업 지원 정책이 부족하고, 관료주의와 비효율적 관행 관습으로 고전하다가 대부분 퇴출
- 반면, 일본 기업들은 모디 총리 집권 이후, 일본-인도 정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 속에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

□ 이에, 한국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방식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한 시점

- 단독투자 또는 한국기업 간 공동투자에 국한하지 않고, 현지 우수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투자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

- 인도 기업 중에서도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한 기업이 많아졌고, 세계 공급망(GVC) 재편에 부응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원역량을 보완하고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합작 사업 추진이 바람직함

- 또한, 신설(그린필드) 투자만이 아니라 기업 인수합병(M&A) 및 M&A 후 증설(브라운필드) 투자의 유효성도 검토가 필요

- 최근 인도 정부가 패스트 트랙(fast-track) 합병 제도 확대, 기업 합병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M&A 투자 환경이 더욱 개선되었고, 인도 기업들도 대부분 M&A 방식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도모
- '30년까지 국유 자산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므로, 철강 등 중화학 공업 분야에서 민영화 참여 준비도 필요해 보임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[참고자료]

[보고서/논문]

Ernst & Young, Union Budget 2025-26('25.2.11.)

Invest India, India's Union Budget FY 2025-26: Key Takeaways('25.2.1.)

KOTRA, 해외시장뉴스, '2025-26 인도 연방 예산안 주요 내용('25.3.10.)

[홈페이지]

drishtias.com 홈페이지

(https://www.drishtias.com/daily-updates/daily-news-analysis/union-budget-2025-26/print_manually)

Embassy of Japan in India 홈페이지(https://www.in.emb-japan.go.jp/itpr_ja/11_000001_00668.html)

Vision IAS

홈페이지(<https://www.visionias.in/resources/material/?id=1484&type=budget>)

인도 정부 National Portal of India (<https://www.india.gov.in/spotlight/union-budget-2025-2026>)